

# 문 VS 손김정 결선투표 갈등 고조

〈손학규·김두관·정세균〉

## 非문재인 “관철 안되면 중대결심” 강경 최고위, 내일 경선 룰 확정 연기 가능성

경선 룰을 둘러싸고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경선 룰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경선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이해찬 대표는 16일 경선주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비(非)문재인’ 후보들이 불참을 선언해 아예 무산됐다.

민주당 경선준비기획단도 전날 경선 주자 대리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선 룰 회의를 개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주자들은 경선 기획단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경선 룰이 문재인 상임고문에 유리한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주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된 안을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주자들은 경선 기획단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경선 룰이 문재인 상임고문에 유리한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주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된 안을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주자들은 경선 기획단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경선 룰이 문재인 상임고문에 유리한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첫-오프를 폐지하고 현재 7명의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 끝까지 완주하며 국민적 감동을 견인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주자들은 경선 기획단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경선 룰이 문재인 상임고문에 유리한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고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담합 주장은) 박근혜 같은 이야기”라며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 경선 캠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원내대표 역할분담) 답합 행위를 지지했던 문재인 후보가 답합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완전국민경선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경선 룰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경선 일정 지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은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 중 당헌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절충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고위에 전달했다”며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는 주장은 기획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국민 70%, 당원 30%로 돼 있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 비율 중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결선투표제나 배심원제는 완전국민경선의 근본적 룰을 바꾸는 것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경선 룰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경선 일정 지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선기획단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 손학규 “대통령 임기내 통일 이루겠다” 민주 “총리 해임 안하면 해임안 제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의 장기 비전인 ‘한반도 중립과 통일 방안’을 제시한 뒤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상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적극적 통일 방안”이라며 “역내 관련국로서는 핵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해임하지 않으면 17일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기로 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젠다를 위한 첫 조치로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공동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난 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통일 방안은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남북연합을 완성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법·제도적 통일국가 완성 이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짐을 덜어 드려야 하는데 발목을 잡고 (같이) 자꾸 물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 돼 늘 죄송스런 생각이 많았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 불거진 대선자금 수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근혜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선택”

###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 “유신, 역사판단에 맡겨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5·16이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유신체제에 대해서 “지금도 찬반논란이 있으나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받은 분



새누리당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사당화’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들과 가족분들께겐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밝힌 내용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는 “당헌외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

은 상상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를 비판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에 “너무 민었다”며 “100% 믿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김병화 대법관 낙마 하나 민주, 청문회보고서 채택 거부

### 현병철 인권위장 후보도 가능성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를 공언하는데다, 여당도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두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9대 국회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고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인사청문 특위는 대법관 후보 4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다소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재직 중 재산 은닉·아들 병역 기피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인사청문회 열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이날 한 일간지 광고에 ‘현 권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현 위원장 스스로 떠나야 한다’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의원들 “대선자금 수사하라”

###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 불거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 불거진 대선자금 수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현 의원 등은 이날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향의방문, 채동욱 대검 차장을 면담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수사대상에 오른 분들과 구속된 분들을 충분히 수사한다면 대선자금의 많은 부분이 밝혀질

수 있다.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 때마다 검찰총장이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는데 총장이 나와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듯한 인사를 한 것은 유감”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의 검사장 승진 논란을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 경매투자

지분물건등 특수물건 NPL 부실채권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주1회 2시간 3개월 스테디
- 교육비 / 입장활동비등 회비 550만원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수료증 / 평생 무료상담 혜택

주 |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